



요약

- 주요국들의 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2021년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으나, 회복의 정도는 국가들마다 많은 차이가 나고 있음
- 본고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2019년 대비 경제 규모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전체 GDP 및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물가 및 재정건전성과 민간소비와의 관계를 파악해보고자 함
- 전반적으로 OECD 주요 국가들은 전체 GDP보다는 민간소비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OECD 회원국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 총 20개국에서 2021년 GDP가 2019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판단됨
 - 반면, 민간소비의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 23개국이 2021년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민간소비 회복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들의 상황과 비교할 때, 재정의 여력 여부보다는 물가 불안을 더욱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21년 민간소비 증가율과 2019~2021년 GDP 대비 정부부채의 증가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보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낮으나 정부부채가 더 증가한 국가들이 반대의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2021년 민간소비 증가율과 202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보다 높은 민간소비 증가율과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국가들이 반대의 경우보다 많았음
-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다른 국가들과 단순 비교하여 판단할 때,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가를 가급적 자극하지 않으면서 경제 활동을 최대한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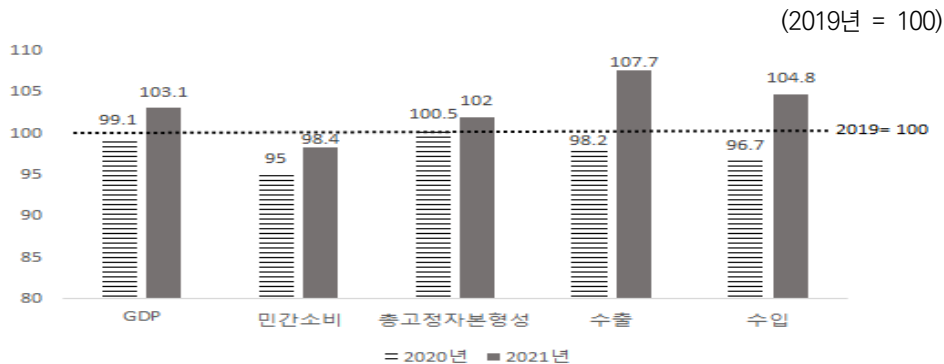


1. 2021년 경제성장 회복세

○ 2020년 코로나19 여파와 부진을 겪었던 우리 경제는 2021년 대부분의 영역에서 성장세를 회복하는 추이를 보였음

-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듬해인 2020년에는 소비, 수출, 수입 등 주요 지표와 더불어 전체 GDP도 감소세를 기록하였음
- 2021년에는 주요 GDP 최종 지출항목들이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2019년 수준을 상회하였으나, 민간소비의 경우는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민간소비는 일반 국민의 체감 경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변수이고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지표인 만큼 관련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림 1〉 2019년 대비 2020·2021년의 실질GDP 지출항목별 규모



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기초로 산출함

○ 본고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 규모가 어떠한 수준으로 회복되었는지를 GDP 및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물가 및 재정건전성과 민간소비와의 관계를 파악해보고자 함

-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2021. 12¹⁾)에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보고하고 있는 주요의 경제 지표의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 등의 변수들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
- 우선 OECD 회원국들의 GDP와 민간소비가 2019년 대비 어느 수준으로 회복됐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유형별로 비교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위기극복의 핵심변수가 되고 있는 민간소비와 물가 및 정부 부채 등과는 상호관계를 비교하고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1) OECD는 연 2회 6월과 12월에 Economic Outlook을 발간하는데 12월 보고서의 당해 연도 수치는 상당 부분 실적치에 기반을 두고 발표하는 만큼 사실상 추정치에 가까움.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보고서의 2021년 GDP와 민간소비 증가율은 각각 4.0%, 3.4%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은행의 실적 발표치 4.0%, 3.6%와 거의 유사한 수준임. 따라서 2021년 지표는 완전한 확정치가 아닌 만큼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밝혀두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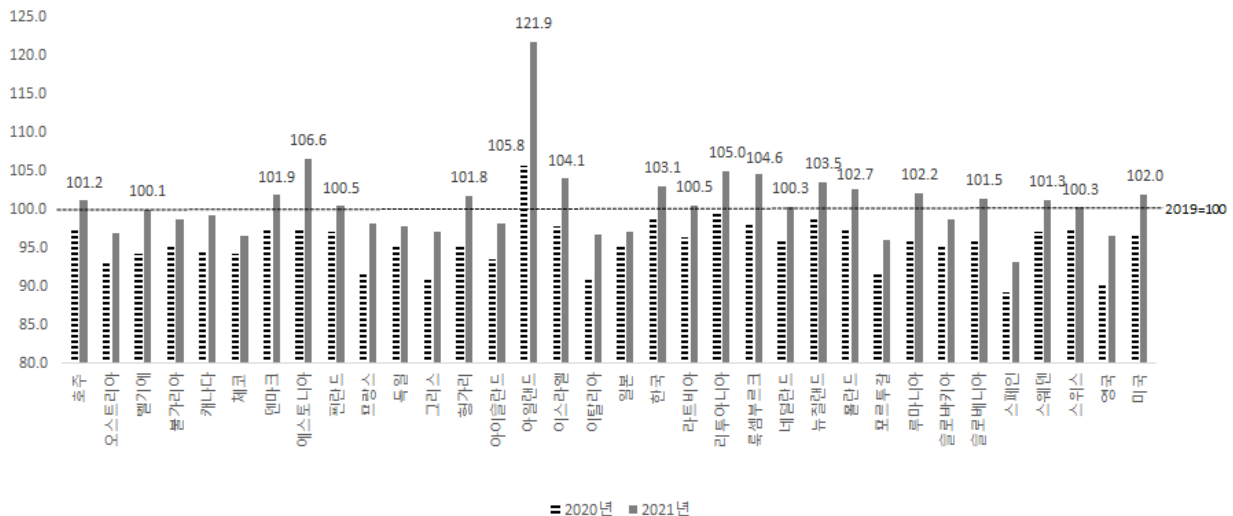
2. 주요국의 경제 성장 회복세 비교

○ OECD 회원국 중 논의 대상 34개국²⁾ 대부분은 2020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 후, 2021년에 반등하였으나 다수의 국가가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2〉 참조)

- 2020년 GDP는 지속 성장한 아일랜드를 제외한 33개국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1년에는 플러스 성장률로 반전되면서, 총 20개국의 2021년 GDP가 2019년 수준을 상회함
 - 반면,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영국 등 14개국은 2021년 실질GDP 규모가 2019년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OECD 주요국 2019년 대비 실질GDP 수준

(각 국가의 2019년 실질GDP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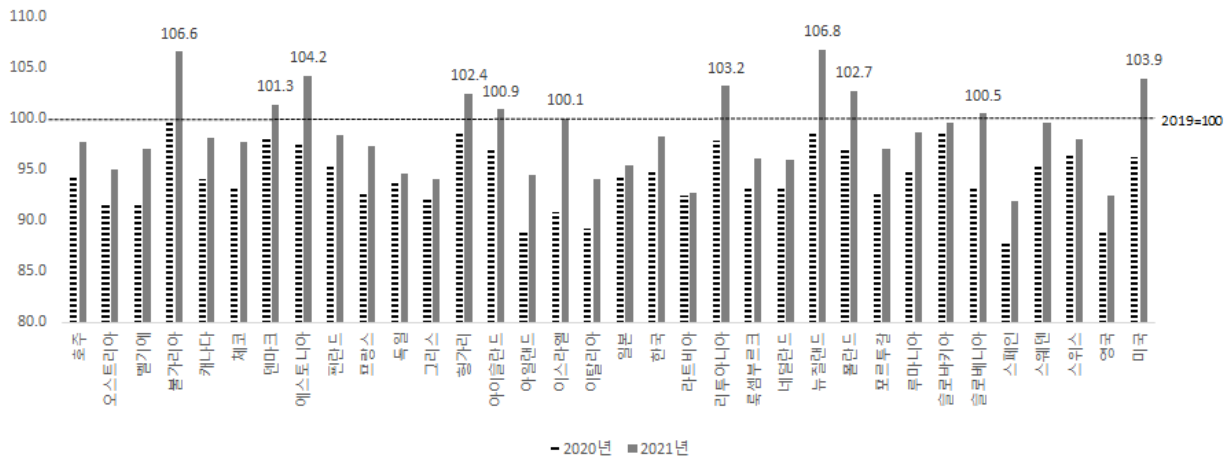
주: 각 국가의 2020·2021년 실질GDP가 자국의 2019년 수준을 상회한 경우에만 수치를 표기하였음
 자료: OECD 자료를 기초로 산출함

- 민간소비의 경우 2020년에 논의 대상 34개국 모두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한 후, 2021년에는 반등했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23개국에서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그림 3〉 참조)
 - 덴마크, 에스토니아, 헝가리,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미국, 불가리아, 아이슬란드 등 11개국은 2019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2) OECD의 회원국은 총 38개국이나 노르웨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 등 4개국은 비교대상 자료가 모두 확보되지 않아 총 34개국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실시함

〈그림 3〉 OECD 주요국 2019년 대비 실질민간소비 규모 수준

(각국의 2019년 실질민간소비 = 100)



주: 각국의 2020·2021년 실질민간소비가 자국의 2019년 수준을 상회한 경우에만 수치를 표기하였음
 자료: OECD 자료를 기초로 산출함

○ OECD 회원국 중 34개국의 실질GDP와 민간소비의 최근 추이를 통해서 볼 때, 많은 국가들이 GDP보다는 민간소비의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표 1〉 참조)

- 34개국 중 미국, 덴마크, 이스라엘 등 9개국은 2021년 GDP와 민간소비가 모두 2019년 수준을 상회한 반면,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12개국은 GDP, 민간소비 모두 2019년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와 호주, 네덜란드 등 11개국은 실질GDP는 회복했으나 민간소비는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불가리아와 아이슬란드 등 2개국은 실질GDP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민간소비는 회복되는 특징을 보임
 - GDP는 회복되어도 민간소비는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반대의 경우보다 매우 많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주요국들은 민간소비 회복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³⁾
 - 민간소비에 비해 실질GDP의 회복이 양호하게 나타난 국가들의 경우 주로 대외부분과 투자, 정부소비 등이 뒷받침한 경우가 많았음
- 코로나19 이후 많은 국가들의 정책 목표는 전체 GDP보다 일반 국민들과 직접 관련된 민간소비의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가 많았으며, 재정 정책도 정부소비의 증가보다는 소득 보조를 통한 민간소비 증가에 초점이 맞추는 경우가 많았음

3) 실질GDP와 실질민간소비의 2019년 대비 2021년 값을 34개국에 대해서 비교해보아도 28개국에서 실질GDP의 값이 실질민간소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 2019년 대비 2021년 실질GDP와 민간소비 규모의 유형별 비교

구분		2021년 실질GDP	
		2019년 수준 상회	2019년 수준 미달
2021년 실질민간소비	19년 상회	덴마크, 에스토니아, 헝가리,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미국 (9개국)	불가리아, 아이슬란드 (2개국)
	19년 미달	호주, 벨기에, 핀란드, 아일랜드, 한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스위스 (11개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영국 (12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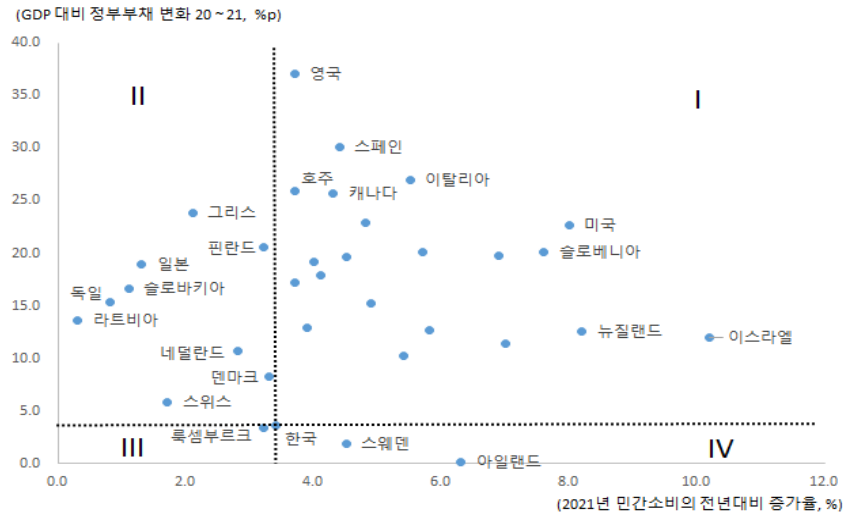
3. 민간소비와 재정 및 물가

○ 재정 확대와 민간소비 진작 정도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 시 비교적 양호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됨(〈그림 4〉 참조)

- 2021년 GDP 대비 정부부채의 2019년 대비 증가⁴⁾정도(%p)와 2021년 민간소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34개국에 대해서 비교한 결과 두 변수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음
 - 두 변수 간 상관관계수는 0.003로 나타났으며, p-value는 0.99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본고는 두 변수 간의 신뢰할 만한 관계식을 찾기보다 두 변수 사이의 분포도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4분면으로 나누고,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정부부채의 증가폭은 컸으나 민간소비 증가율은 작게 나온 열위국가(2/4분면)의 개수와 우리나라보다 정부부채는 적게 늘었으나 민간소비 증가율은 높은 우위국가(4/4분면)의 개수를 비교하였음
 - 1/4분면과 3/4분면의 경우 명확하게 우열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논외로 하였음
- 비교 결과 우리나라보다 열위에 있는 국가들이 우위에 있는 국가보다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정부부채 증가와 민간소비 증가 사이의 관계는 타 국가들과 비교 시 양호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보다 열위에 있는 국가(2/4분면)는 일본, 독일, 네덜란드 등 9개국으로 나타났으며, 우위에 있는 국가는 스웨덴, 아일랜드 등 2개국으로 나타났음

4) 정부부채의 증가는 국가별로 2020년과 2021년 중 한 해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고 상호차이가 있어, 재정 확대의 정도를 2년간의 정부부채 증가로 파악하였음

〈그림 4〉 정부부채 증가 vs. 민간소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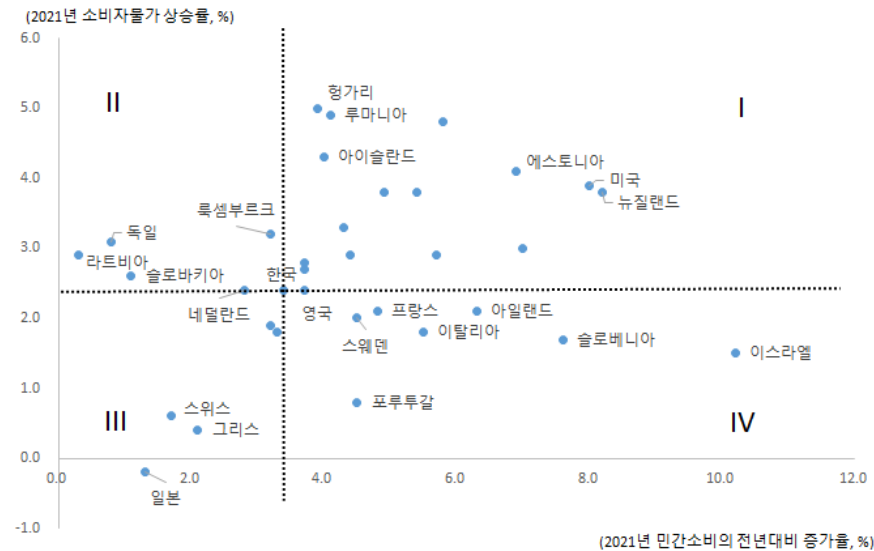
주: 인천과 경남의 경우 거의 동일한 수치를 보며 동일한 점으로 표기됨
 자료: OECD 자료를 기초로 산출함

- 민간소비 증가와 물가 상승과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 시 민간소비 증가 대비 물가 불안 정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그림 5〉 참조)
 - 202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2021년 민간소비 증가율 사이의 상관계수는 0.24이며, p-value는 0.30으로 나타나 정부부채와 민간소비 사이보다는 양의 관계가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본고는 〈그림 5〉의 4분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보다 우위에 있는 국가들이 열위에 있는 국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보다 물가 상승률은 높고 민간소비 증가율은 낮은 열위 국가(2/4분면)의 경우 독일, 네덜란드,⁵⁾ 라트비아 등 5개국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보다 물가 상승률은 낮으면서 민간소비 증가율은 높게 나타난 우위국가(4/4분면)는 이스라엘, 스웨덴, 영국,⁶⁾ 프랑스 등 8개국에 이르고 있음
 - 우리나라는 민간소비 증가 수준에 대비한 물가 상황은 국제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5) 네덜란드는 물가 상승률은 같았으나 민간소비 증가율이 낮아 열위국가에 포함시켰음

6) 영국은 물가 상승률은 같았으나 민간소비 증가율이 높아 우위국가에 포함시켰음

〈그림 5〉 소비자물가 상승률 vs 민간소비 증가율



자료: OECD 자료를 기초로 산출함



4. 시사점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민간소비의 회복이 중요하나, 이와 관련한 재정(정부 부채)이나 물가 등과의 관계는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 다른 국가의 사례를 단순 참고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OECD 주요국가들은 전체 GDP보다는 민간소비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재정의 소비 진작 효과도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정도 등 비경제적인 상황의 차이와 더불어 해당 국가 국민들이 자국 경제에 대해 갖는 신뢰 등에 영향을 받아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물가 불안도 수요 증가뿐 아니라, 국제 원자재의 상승이나 해당 국가 고유의 물류 문제 등에 기인하고 있어 상호관계성을 단순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움
- 민간소비 회복과 관련한 재정 및 물가 여건을 국가 간 우열을 단순비교하는 방법으로 판단할 때, 우리나라는 재정악화보다는 물가불안을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보다 물가 상승률은 낮으면서 민간소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국가들이 반대의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미루어보다 내수 회복이 물가를 더욱 자극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현재 우리 경제가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가를 가급적 자극하지 않으면서 경제 활동을 최대한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